



아름다운 우리 산림, 산불로부터 지키자

이 병 노 담양군수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봄철 기후변화와 함께 바짝 말라버린 임야는 불어오는 강풍에 대형산불로 확산할 위험성을 높인다. 올해에도 대형산불 소식이 이곳저곳에서 전해오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18~22) 전남에 발생한 산불은 198건이고 피해면적은 111ha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벌써 30건으로 10년 평균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추세다.

3~4월은 본격적인 영농 준비와 청명·한식 기간을 전후해 묘지 사초 등 입산자의 실화로 산불이 많아지며, 강풍 특보 발효 시에는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도 커진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며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소각(28%), 입산자 실화(10%), 재처리 부주의 등이 주원인으로 대부분 사람에게 의해 발생한 화재이다.

산불과 같은 산림훼손 행위에 대해 순찰과 규제를 강화하여 예방하는 정책만이 날로 규모가 커지는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할 수 있다.

담양군은 산불예방 강화를 위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2.1~5.15)을 지정하고 읍면에 산불감시인력(24명)을 배치해 산불취약지역을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마을방송과 차량방송을 통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22.11월 시행)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산불진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3개조)와 산불 진화 헬

기 임차(1대) 등으로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각을 하면 안 된다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 우리 군민들이 산불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산불방지 활동에 동참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소각 행위 단속을 피하고자 새벽이나 일몰 직후 몰래 소각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가 해충 방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관행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뤄져 왔는데 기인한다.

우리 군민들은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가 영농준비 등의 효과보다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훨씬 크고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 알아야 한다.

산불이 앓아간 숲을 자연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나 하나쯤이야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수백 년간 일구는 자연이 한순간에 파괴될 수 있다.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주민의 작은 실천으로부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산림의 공익적 순기능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불예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올해에는 모든 주민의 동참으로 아름다운 우리 숲을 지켜나가기 기대해 본다.

기고

중고거래처럼 판매되는 마약, 경각심 지켜야

신 용 진 보성경찰서 경무계 경사



최근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약음료 협박 사건 등 각종 마약류 범죄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의 지갑을 노렸던 보이스포싱에 이어, 마약을 건강식 음료인 것처럼 속여 청소년에게 먹인 후 학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는 마약류 피싱 범죄가 등장한 것이다.

이처럼 마약은 학생, 일반인 등 연령대와 상관없이 과거 비밀리에 거래되어 왔던 환경과는 달리 온라인상에서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물품이 되었다.

당근마켓에서 중고물품을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해외직구 및 SNS 등을 통해서 마약이 손쉽게 유통될 수 있는 것이다.

전남·광주경찰도 최근 마약류 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사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사 착수부터 재판까지 기관별 마약수사 전담 인력들이 마약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최근 청소년 마약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 차원에서도 마약의 위험성과 심각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방 홍보 및 올바른 교육을 통해 마약에 손을 대면 절대 안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잘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피로회복제, 사탕 등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음식이나 음용수는 먹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하고, 호기심에 접한 마약은 절대 호기심으로 끝내지 말고 내 결에서 마약 중독으로 머무를 수 있기에 시작조차 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하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테러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마약류 범죄는 뿌리뽑아야 할 국제적인 범죄이며, 마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기관에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마약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 및 피해 사례 등으로 경각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 범죄가 뿌리뽑혀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마약 청정지대로 발돋움했으면 한다.

기고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김 정 섭 영광부군수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불은 낙뢰와 화산활동 등 자연현상에 기인하기도 하고 인간의 부주의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현상에 의한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산불의 경우 대부분이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 산불은 건조한 기상여건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9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한다. 봄철은 산림이 울창해지고 가연물질이 많아져 대형산불로 발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 봄의 정취에 흠뻑 젖어 마음이 들뜬 등산객들의 실수를 비롯하여 봄이 오면 마음이 바쁜 농민들의 논밭두렁 소각행위 그리고 청명이나 한식을 전후하여 흔히 이뤄지는 조상의 묘지 이장과 유품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발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림화재의 건수의 60% 이상, 피해면적의 9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빨리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산불이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와 소방서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교육·홍보 및 훈련을 추진하고 있다.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몇 가지 있다.

먼저 산림 인접지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쓰레기 소각행위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경지에서는 관례적으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해충도 죽이지만 해충의 천적이나 익충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30만 원에 처해지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으로 입산 시 라이터 등 화기물 소지와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입산 시 흡연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또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나 야영은 하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불을 목격했을 때는 산림당국나 소방서에 즉시 신고하고 산불 진행방향에서 벗어나 바람이 부는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화재장소보다 낮은 지역으로 대피해야 한다. 애써 가꾼 산림도 산불이 나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다. 이를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는 40년에서 100년이란 긴 세월이 걸쳐 막대한 노력과 비용이 투자되어야 한다.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면 사전예방과 함께 그 야말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시민정신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고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인광알고음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 정 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술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